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수신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

제목 :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
조례안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
조례안 1부. 끝.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 (서명 또는 인)

외 7명

(발 의 의 원 서 명 따 로 붙 임)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
조례안

【발의의원】

[illegible]

의 안 번 호	2752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
에
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손인수 의원 외 7명
발의 연월일	2021. 5. 10.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

조례안

(손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5. 10.

발의의원 : 손인수, 노종용, 차성호,
손현옥, 안찬영, 이순열,
박성수, 박용희

1. 제안이유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·학부모·교직원 등 이해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
나.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다.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과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1조)

라. 갈등관리전문가 등 위촉과 비밀유지,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~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
항(붙임 1)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붙임 2)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
에 관한 역할·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
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
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갈등”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이
교육정책(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과 폐지,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·추
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
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.
2. “이해관계인”이란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함에 있어 영
향을 받는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일반시민(교육정책으로 영향을
받는 직접당사자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
3. “갈등관리”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·해결하기 위하
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4. “갈등영향분석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
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·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

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
5. “법령등”이란 「행정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해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제4조(자율해결) 교육갈등의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정보공개 및 공유) 교육감은 이해관계인이 교육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(의견수렴의 절차, 조정 등 분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)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갈등영향분석)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·시행·변경함에 있

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
2.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
3.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
4.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
5.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
6.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
7.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)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.

제9조(갈등조정협의회)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

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. 다만, 필요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(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)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제12조(갈등관리 전문가 등의 위촉 등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·지정 또는 활용할 수 있다.

1.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
2.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·법령·제도·문화 등의 조사·연구
3.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·보급
4.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5.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·연구
6.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·해결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비밀유지) 교육감과 소속 교직원, 협의회 구성원,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4조(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)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.

제15조(수당 등)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☑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
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(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교육감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안 제9조제2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손인수